
	<b>보도자료</b>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일시	2021. 5. 12.(수) <b>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</b> 온라인 : 2021. 5. 11.(화) <b>정오 12:00 이후</b>	총 7쪽 (붙임 2쪽 포함)	
배포일시	2021. 5. 11.(화)	담당부서	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
담당과장	박정애 (02-2100-6171)	담당자	전진희 사무관(02-2100-6178) 주리나 주무관(02-2100-6180)

## 생활용품의 유해물질 평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해야

-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1차 정책 개선 권고 -

- 생활용품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, 환경 유해인자 감시를 위한 조사에 성별 노출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 권고
-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인력의 성별 다양성 확보,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권고

□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\*, ①**환경보건 종합계획**, ②**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** 등 2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.

\* 2020년 인공지능(AI)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,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 12개 정책과제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

● **특정성별영향평가** :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하고,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(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, 제11조)

○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,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
□ 이번 대상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환경보건 종합계획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

□ **(현황)** 산업발전,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통량과 신규 유해물질이 증가하면서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,

국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·관리,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였다.

○ 환경 유해인자 사전 감시를 위해 실시하는 **기초 조사, 건강영향조사 등에 대한 설계·분석 시, 성별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미흡**하거나, 미용업·청소용역과 같은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.

\* 환경성 질환 발생 현황과 유해물질 노출 현황, 환경보건에 관한 인식조사 등에서 성별 통계 생산·활용 미흡

○ 또한, 생리대 등과 같은 생활용품과 관련해 성별에 따른 **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한 유해물질 노출 요인 등을 관리할 필요**가 있으나, 제품 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해성 평가 등에서 **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부족**하였다.

\*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피해 경험 : 일회용 생리대와 향이 포함된 생활화학 제품, 가습기살균제 등(시민활동가 등 초점집단면접 결과)

□ **(개선권고)**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하였다.

○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\*에서 **성별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포함**하도록 하고, 우선관리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**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생산**하는 한편,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.

\* <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> 3년 주기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,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 등 조사 (환경보건법 제14조)

- 또한,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및 생활 패턴(가사, 월경, 수유 등)을 고려한 패널 구축 및 조사 등을 통해 주요 노출 원인 및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는 한편,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 시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.

- 아울러,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와 관련된 양성평등 의제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**성인지 관점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**하도록 하였다.

- \* 환경보건센터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 민감성의 성별 차이, 기후변화에 따른 성별 특성 조사·연구 등 추진

## 2.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정책 개선권고

□ **(현황)**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대부분(89.5%)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로, **연구인력과 연구과제 예산, 연구책임자 등에서 성별 불균형**을 보였으며, 이러한 불균형은 연구개발사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\* 보건의료 연구개발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'14~'18년 평균 17.4% 수준, 지난 10년간 총 연구비 비중은 남성이 전체 83.8%, 여성이 16.2%임

- \*\* (해외사례) 1997~2000년 판매 중지된 10개 의약품 중 8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부작용 야기. 이는 임상 단계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을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분석(Adverse effects in women: implications for drug development and regulatory policies, 미국, 2014)

- 연구개발사업 심의와 선정, 연구인력과 예산 배분 등 연구개발수행 전반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에 **성별 균형 참여를 활성화**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.

- 또한, 보건의료 통계 주요 항목(경제·사회목적별, 연구수행주체별 등)에 대해 **성별 분리 통계가 생산·관리되고 있지 않았다.**

- 아울러,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서는 **출산 및 육아 휴직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하여 여성 연구원들의 경력단절을 초래**하였고, 그 결과 여성 연구원들은 조직 내 관리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.

- 또한, 출산·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체도를 운영하는 경우, 분야별 세분화된 인력 후보군 부족으로 인력 대체에 어려움이 있었다.

- \*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.0%이며,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각각 19.2%, 18.8% 수준임(2018년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 실태조사)

□ **(개선권고)**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 촉진 방안 마련,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하였다.

-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심의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**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**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, **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부터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**되도록 연구개발사업 평가 지침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.


- 또한, **보건의료 통계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**하여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,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의 **일·가정 양립 환경 조성**을 위해 **보상휴가제 등 출산, 육아 관련 제도를 확대**하고 **활성화**하도록 하였다.

- 아울러, 야간 및 주말 연구가 많은 연구기관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, **연구 밀집 지역 인근에 돌봄시설 설치·연계 등 지원**을 강화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분야 대체인력 활용 및 원활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**분야별 세분화된 연구 인력 후보군을 확대**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.

□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“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환경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성별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.”라며,

○ “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, 국민들이 양성평등한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**【붙임】 1. 대상과제별 정책 개선 권고(1차) 내용**  
2.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

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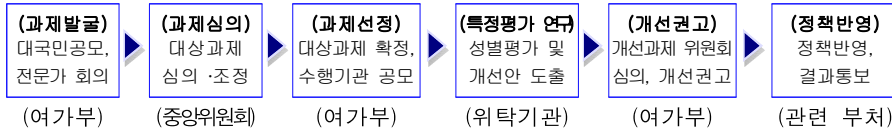
**붙임 1 대상과제별 정책 개선 권고(1차) 내용**

대상과제	개선권고 내용	소관부처
환경보건 종합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환경 보건기초조사에서 노출 특성(노출 강도와 빈도, 기간 등)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포함할 것</li> <li>○ 성별 노출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성별 분리통계 작성 및 결과 활용을 통한 우선관리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할 것</li> <li>○ 생물학적 특성 및 생활 패턴을 고려한 페널 구축 및 조사 등을 통해 주요 노출 원인 및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할 것</li> <li>○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시 성별 특수성을 고려할 것</li> <li>○ 환경보건 측면에서 여성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사업을 강화할 것</li> <li>○ 환경보건 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·운영 시 성별 균형을 고려 할 것</li> <li>○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 대응 및 성인지적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것</li> <li>○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과제 개발 등을 위해 양성평등 의제 논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</li> <li>○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 건강영향 취약지도 구축 시, 성별에 따른 차이 및 특성을 고려할 것</li> </ul>	환경부
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심의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위원회 규정 내 성별 고려를 명시할 것</li> <li>○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부터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</li> <li>○ 보건의료 관련 중장기 목표, 기본방향, 전략별 중점 과제 등에 성인지적 추진 전략 및 정책 이슈를 포함할 것</li> <li>○ 보건의료통계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여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것</li> <li>○ 사업 수행기관 연구인력의 일·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보상휴가제 및 STC(Stop Tenure Clock) 등 복지제도를 확대할 것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보상휴가제: 사용자-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,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</li> <li>* STC(Stop-Tenure Clock) : 출산육아 휴직기간 동안 연구업적 평가를 연기하는 제도</li> </ul> </li> </ul>	보건복지부
	○ 야간 및 주말 연구가 많은 연구기관 연구개발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, 연구 밀집 지역 인근 돌봄시설 설치·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것	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
	○ 대체인력 활용 및 원활한 연구인력 매칭을 위해 보건복지분야 등 분야별 인력 풀 확대 및 관리	과학기술 정보통신부



□ 제도개요

-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분석·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
  - \* (추진근거)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  - '12년부터 '20년까지 고용·일자리, 보건·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총 78 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총 399개 과제에 대해 개선 권고



□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개요

- (추진경과) 대국민공모,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대상과제 선정하고, 정책별 전문가 분석·평가를 통해 개선과제(안) 도출

<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현황 >

주요정책	· 환경보건 종합계획	·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
	·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	· 전문체육 분야 정책
	·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	·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정책
	· 노사관계 지원 정책	· 자살예방정책
	· 국제결혼지원사업	· 코로나 대응 정책
	· 인공지능(AI)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	
생활 체감형 정책	· 지방자치단체 마스크트 성별 균형, 자동음성안내 목소리 개선, 학교 교가·교훈 성차별 요소 개선	